"국가 정상화" vs "충청이 韓 이정표"… 지선 승부처 쟁탈전

與 野

충청 찾은 여야 지도부

민주 "李 정부 성공 위해 승리해야"
국힘, 충청 결집 통해 선거 반전 자신

12일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서 열린 충남도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를 22일 앞두고 여야 수뇌부가 12일 나란히 충청권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며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에선 '충청의 한 표가 대한민국 미래의 이정표'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를 찾아 충청지역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반헌법·반민주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책무를 실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에서 "6·3 지방선거는 당원과 국민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승리해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시대정신을 앞장서 실천하는 대표 선수들"이라며 "여러분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구호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했다"며 "국가를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책무를 여러분들이 실현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천자대회에는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를 비롯해 충청권 지선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들도 자리했다.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에 정 대표는 몇몇 후보자들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전은수 충남 아산을 후보를 두고서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후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아끼고 키우고 싶어 하는 인재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당 지도부와 후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전·세종, 충북·충남이 원팀으로 결집해 9회 지선(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충청이 대한민국 미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충남 천안을 찾아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충청지역 후보자들을 격려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 김태흠 후보 선거사무소에 열린 충남도당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금산 출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가서 '오빠 한번 불러보라'고 애걸하다가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다 구겨놓고 국민적 망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청 출신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8~9명은 공소 취소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그 얘기가 뭐겠나. 우리가 공소 취소해도 국민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공소 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그런 자가 충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며 "대전·충남 통합에 있어서 알맹이 있게 제대로 된 지역 균형 발전이 되도록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충남의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용감하고 힘센 김태흠이라는 장수가 있다"며 "어려울 때마다 나라가 어두울 때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뜨거운 피를 가진 애국시민들이 있다"고 했다.

또한 "충청의 한 표가 대한민국 미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충청의 승리가 보수의, 국민의힘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충청이 일어설 때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충청에서 국민의 힘을 지켜달라. 충청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외쳤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많은 수치에서 드러나듯이 지금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이 남았다"며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셨나.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지금 충청에는 한 50척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은 한 달 동안 전세를 뒤집고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민·박경수 인턴기자 kbm@metroseoul.co.kr

"한반도 방위 주도 노력"… 한미 공감대

안규백-헤그세스 국방장관 회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관심'
韓 국방비 늘려 핵심 국방 역량 강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1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을 만난 안규백 국방장관이 "우리도 (미국의 기조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방위 주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내세웠고, 동맹국 방위 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도 일치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두고는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2028년 전환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한 바 있다. 2029년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방위 책임 확대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에서 한미동맹의 힘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파트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해 11월 서울 방문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위에서) 주된 책임을 떠맡는데서 보여준 안 장관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거쳐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후속 절차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논란 등 한미간 민감한 현안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HMM의 '나무호' 문제와, 한국의 이란 전쟁 관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나무호 폭발이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이며, 한국이 관련 사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AI 과실의 일부, 국민에게 환원해야"

靑 정책실장, '국민배당금' 제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가칭 '국민배당금' 설계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한국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가 석유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유사한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창업과 문화를 두 개의 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으로 갈 것인가, 노령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로 갈 것인가"라고 적었다

/뉴시스

李 "민간 배드뱅크, 도움받고도 20년 추심"

국무회의서 2주 연속 금융권 직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일부 민간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부실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2주 연속 금융권을 직격하며 '포용금융' 의무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언급하며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 대란 수습을 위해 민간이 설립한 배드뱅크다. 추심 강도가 높으며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려면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 그런데 연체채권을 지금까지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몇십, 몇백억씩 배당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이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게 제한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 7000억원을 넘겨받아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불려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